

유럽에 번지는 신사고 “Green GNP” 환경오염도 GNP에 넣는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공해문제가 상당한 골치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빈곤을 추방하고 인류에게 경제적 후생을 가져다 준다』는 낙관론도 이제 완전히 빛이 바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소리가 경제학계에 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都市化)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각종 호흡기 장애, 중금속중독, 기형아분만 등 이른바 「20세기병」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경제학자인 「울만」은 인구 1백만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 약 63만t의 물과 2천t의 식량, 그리고 9천t의 연료가 투입돼야 하며, 그로 인해 액체상태로는 약 50만t, 고체상태로는 2천t, 기체상태로는 9백t의 공해물질이 배출된다고 계량화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경제학자는 『GNP(Gross National Product : 국민총생산)의 증가가 GNP (Gross National Pollution : 국민총공해)의 누적적 증가를 또다시 초래하므로 경제성장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GNP」라는 용어를 비아냥거림조의 두가지 의미로 써가며 「경제성장영화론」(經濟成長零化論 : Zero Economic Growth)과 「인구성장영화론」(人口成長零化論 : Zero Population Growth)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아예 「녹색(綠色) 국민총생산」(Green GNP)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간의 균형점을 찾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 즉, 환경파괴로 인해 성장의 기초가 흔들리는 문제를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현행 GNP의 계산방법을 개선, 앞으로는 환

경피해까지 GNP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을 더한 값에서 단순히 자본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만을 빼는 지금의 GNP 계산방식은, 공장과 시설의 감가상각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만 석유나 삼림과 같은 자연자원의 감가상각은 논외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표로서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가령, 과도한 벌목을 하는 국가가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을 지켜가며 삼림을 관리한 국가보다 단기적으로 볼때는 더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벌목된 나무들은 수입으로 반영되는 반면 자연자원인 삼림의 고갈은 전혀 지출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행 GNP지표에만 충실할 경우, 자원의 기초파괴가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그릇된 정책판단을 반복하게 된다. 말하자면 「소경 제 닭 잡아먹기」식이 될 우려가 높다.

실제 세계자원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리 페토」와 그 동료들이 「자연자원」이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GNP를 다시 계산한 결과, 단지 석유고갈, 토양유실 및 벌목이라는 3가지 항목만을 고려해도 71년과 84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이 원래의 7%에서 4%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개발중인 「Green GNP」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비단 「자연자원」의 감모뿐 아니라 「공해」로 인해 불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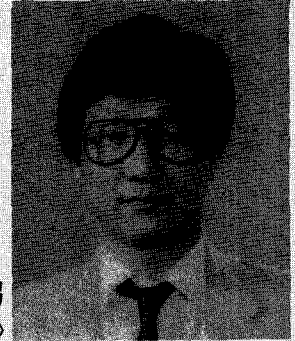
요하게 유발되는 투자까지도 GNP에서 빼내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의 체제에서는 성장으로 잡히는 「하수처리장 건설」등 공해관련 투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 「Green GNP」의 기본 개념이다. 현행 GNP는 인도네시아의 예에서 보듯, 성장을 과장할 뿐 아니라 성장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주장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가 이같은 「Green GNP」의 개발에 가장 적

**현행 GNP지표에만 충실할 경우,
자원의 기초파괴가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그릇된 정책판단을 반복하게 된다.
말하자면 「소경 제 닭 잡아먹기」식이
될 우려가 높다.**

극적이며, 거기에는 「휘팅」이라는 경제학자가 지난 30여년간 온갖 수모를 견디며 새로운 GNP지표의 개발을 촉구하고 나선 게 자극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 「휘팅」의 주장은 「동키호테적 발상」이라거나 「등에와 같은 앵앵거림」으로 비웃음을 받았으나 산성비로 인한 삼림훼손 등 공해문제가 심각한 지금은 전유럽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 중앙통계국은 「휘팅」에게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과 생태계파괴, 그리고 그로 인해 투입되는 환경복구비용을 GNP에 반영하는 새로운 체제를 개발해달라고 공식요청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은행(IBRD)도 「휘팅」의 「환경계



徐源錫

(조선일보·사회부기자)

정」개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극받아 스웨덴도 독자적인 「Green GNP」모형개발에 나서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1차적으로 「자연자원」계정을 GNP회계체제에 신설키 위한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지난 70년부터 85년까지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결과, 서독의 환경보전투자가 이 기간중 GNP의 5%에서 10%로 대폭 늘어났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투자가 여전히 성장으로 간주돼 국민계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은 환경보전 관련투자를 진정한 의미의 GNP와 구별해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Green GNP」가 이들 선진국에서 공식 도입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은 현행 GNP의 보조지표로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투자」나 「자연자원」계정의 개념정립이 아직은 애매모호할 뿐더러 「Green GNP」지표만 사용할 경우의 정책수단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reen GNP」개념의 도입은 공기와 물이 지금은 별다른 대가없이 쓸 수 있는 자유재(自由財)로 간주되고 있지만 곧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될 경제재(經濟財)로 떠받들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환경오염이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는 간접적인 경고인 셈이다.

선진국의 「Green GNP」개발은 공해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도 여전히 경제성장이라는 외형에만 얽매일 수밖에 없고, 어찌보면 스스로 얽매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